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음 11월 18일) 제17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사업 신속 추진돼야 투자 담보”

도, 정책토론회 개최

내부 간선도로 노출부지 확대 개발 본격화 여건 마련에 따라

“매립토지 공급 등 위해선 농지기금 활용 용지매립을”

새만금 내부용지에 대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새만금이 최근 내부간선도로 구축과 노출 부지 확대에 따라 내부개발을 본격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본관에서 여.야 3당 전북도당위원장 공동 주최로 ‘새만금 내부개발 전략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없어 장기간 공유수면으로 방치되고 있는 새만금 매립을 국가가 단기간 내 집중 투자로 선매립해 원형상 태로 민간투자자에 공급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호기를 맞아 향후 4~5년간의 단기 집중투자가 이뤄진다면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 투자유치 추진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관계부처(국토부, 새만금정

등)장과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는 물론 도내의 국회 의원, 자치단체장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가 됐다.

특히 저성장과 고실업의 늪에 빠져 있고 정치경제적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대한민국의 돌파구 마련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 해답을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987년 ‘새만금’이 정부 공식문서에 등장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용지조성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새만금사업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현 정권까지 역대 대선공약에 빠지지 않고 새만금개발이 약속됐으나 아직도 기반조성 중으로 사업초기단계에 머물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새만금사업이 대한민국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매립 등 용지조성 사업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새만금기본계획상 내년까지 전체부지의 45% 조성(착수), 2020년까지 총 개발면적의 73% 개발 목표이나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중인 부지는 전체 계획면적(291km²)의 27.4%(79.6km²) 수준으로 목표 대비 현저하게 추진율이 저조하다”며 “이를 극복하고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5년 내 과감한

투입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토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나머지 부지 매립에 필요한 비용이 2.7조원 정도”라며 단기 개발이 가능한 재원과 개발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제시했다.

또한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매립 토지의 적기 공급과 안정된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농지기금을 활용한 용지매립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민간이 매립과 조성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현 용지개발 시스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개발의 재정 부담 및 위험요인 감소를 통한 민간 참여 촉발을 위한 국가의 선 매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민간투자 대상용지 매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농지기금을 선 투자해 방수제를 쌓고 매립해 조사료 재배 등으로 활용하다가 개발 수요발생 시 토지용도별로 투자자에게 매각해 투자기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조언도 있었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려면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새만금 내부용지를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상태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재용 기자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가운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대 전 총장·학장 “정유라 대입 특혜 없다” 발뺌

최순실 국정특위 4차 청문회

최경희 전 총장 “진상조사 불구 조직적 특혜 없었어”

김경숙 전 학장 “학점부여 교수 개인의 권한” 주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4차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입학 특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관련기사 3면> 최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정유라에게 입학과 학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교육부가) 저희 학교에 대해 엄격한 진상 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항변했다.

최순실과 정유라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유라는) 입학 때는 없었고, 1년 후인 2015년 가을쯤 학교를 방문했을 때 잠시 들러서 얼굴 정도 인사를 했다”며 “(최순실은) 올해 4월 딸 정유라와 잠시 같이 왔다. 그 학생이 휴학 중이라 학사를 의논한다고 잠시 인사하러 왔다. 특별한 말없이 인사 정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가 최태민 사위, 즉 권력 실세인 것을 알았느냐”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접점이 이공계여서 잘 몰랐다”고 말해 반축을 사기도 했다.

최 전 총장은 남궁근 당시 입학처장이 “정유라 딸인 정유연(정유라)이 입학원서를 접수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정확한 건 기억이 잘 안난다. 조사를 했음에도 조직적으로 특혜를

당시 정유라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고, 금메달을 소지하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는 입학과 관련된 사항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감사 자료에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다는 지적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수 없다”고 모욕죄로 일관했다.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도 정유라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김 전 학장은 정유라의 학점관리를 지시했느냐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 질의에 “없다”며 “학점 부여는 교수 개인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전주시,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아사업 424명 규모로 추진

전주시가 장애인의 소득보장의 기회 제공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주시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17년도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을 올해(362명)보다 62명 늘어난 총 424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일자리아사업 유형은 크게 일반형일자리(행정도우미)와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맞춤형일자리 등으로, 시는 장애인일자리아 사업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꿀 첫 번째 도시, 장애인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변화되는 전주를 만들 계획이다.

먼저,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시·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시는 총 5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지일자리는 복지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유형에 맞는 각종 업무를 맡게 되며 총 122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14명 규모의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파견돼 건강한 안마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웃음과 건강을 책임지게 된다. /김영재 기자

이와 관련, 시는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전주장애인일자리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직업상담·평가, 재활, 취업알선, 적응지도, 고용주 간담회 및 사업제 발굴·관리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을 통해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각 장애별 특성에 대해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업무배치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청와대, 대법원장 일상 사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문건 공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담한 비위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날마다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사장은 또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든지, 대법

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든지를 포함한 두 건”이라고 발언, 최성준 방통위 원장 역시 춘천지법원장 시절 청와대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후 관련 문건을 국정특위에 제출했다.

제출된 문건에는 양 대법원장이 일과 시간 중 주기적으로 등산을 한다는 내용의 비판 보도에 대한 대법원 해명과 내부 분위기, 법조계 반응 등이 기록돼 있다. 또 최 위원장 관련 문건에는 춘천지법원장 시절 관용차 사적 사용 및 대법관후보 추천 전 언론지원 요청, 대

법관 탈락 후 언행 등 동향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정리돼 기록됐다.

조 전 사장은 이른바 ‘정윤희 문건 파동’ 이후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해임됐다는 의혹 당사자다. 당시 세계일보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VIP측근(정윤희) 동향’ 등 총 17건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청와대 문건이 아닌 국정원 문건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증인이 공개한 문건은 양식으로 보면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읽니다.”

장수물
모두가 가보고 싶은 장수군입니다.

장수물 MALL | NAVER | 장수군청 | 검색

천천면 남양리